

## 가계소비의 불평등

윤 기 증

---

---

본 논문은 근로자가구소득에 의한 불평등 대신에 전 가구의 소비지출측면에서 불평등을 계측하고자 한다.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비목별 소비에 대한 소득탄력성과 전 가구의 비목별 소비지출탄력성을 구하고, 전 가구의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한 불평등도를 얻어 3자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 결과 전 가구의 비목별 소비지출불평등도가운데 '교육비' 불평등도가 도시 전 가구의 불평등도로 지목된다.

---

---

### I. 서 론

소득불평등은 지니계수나 일정 분위의 소득배분율로 측정하고 있다(〈부표 3〉 참조). 정부(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들 지표의 작성자료는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사회통계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가계조사」이다. 「사회통계조사」는 1977년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크기 1만 7,000가구 내지 1만 7,500가구로, 그리고 1991년부터 3만 2,000가구 크기로 매년 조사되고 있으나 소득불평등 지표인 「소득10분위별 소득분포 및 소득집중도」만은 단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도시가계조사」는 1963년 이후 매년 월별로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얻는 소득(또는 소비)계층별 가구분포는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전국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자료에 의해서 작성되는 「전 가구의 소비지출 계층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표이며 다른 하나는 근로가계만을 대상으로 조사되는 자료에 의해서 작성되는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표이다. 전자의 표는 전 도시가구 대상의 「소비계층별 가구분포」 표를 얻어 소비의 불평등도를 계측할 수 있으며 후자의 표에서는 근로자가구 대상의 「소득계층별 가구분포」 표를 얻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계측할 수 있다.

「사회통계조사」에서 얻는 불평등도는 단속적으로 발표되어 시계열이 성립되지 못하고 또 「소득계층별 가구분포」 표에서 얻는 불평등도는 근로자가구만이 대상이라는 점, 또 근로자가구 표본 크기는 전 도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표본의 60% 정도만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불가피하게 도시근로가계의 소득불평등도 대신 도시가계의 소비불평등도로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첫째는 근로가구의 표본규모가 적기는 하나 근로자가구의 소득불평등도의 시계열변동을 통해서 불평등변동의 인과관계를 분석·검토하고, 둘째는 도시가구의 소비특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가구소비의 비목별 소득탄력성과 소비지출탄력성을 추정하여 비목별 소비의 특성을 인식한다. 그리고 셋째는 이들 비목별 지니계수를 추정하여 탄력성과 비교, 관련성 여부를 분석한다. 즉, 비목별 소비재화(또는 서비스)가 가구소비지출액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면 소득에 대해서도 비탄력적일 것이고, 또 가구지출에 대한 불평등도 낮을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탄력적이면 불평등도도 클 것이다.

## II. 근로자 가구소득 불평등

앞으로 보게 될 <표 1>과 <표 2>, <부표 3> 그리고 <그림 1>에서와 같이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는 1985년부터 점차 개선되는 경향이다. 즉, 1985년에 0.318이던 것이 1990년에는 0.302로 개선되고 있다. 또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통계조사」에서 얻어진 「한국의 사회지표」상의 전국의 불평등지표인 지니계수가 1980년에 0.389, 1985년에는 0.345, 그리고 1993년에는 0.310으로 개선되는 경향이다. 불평등도의 절대수준도 낮고, 또 1985년 이후 개선되는 경향이다. 미국, 영국 그리고 OECD 각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sup>1)</sup> 1975년과 1986년은 1960년 이후 한국의 근로자가구 소득변화에 획기적인 해라 할 수 있다. 1962년부터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힘입어 도시근로자 소득은 향상되고 이러한 소득증가는 도시빈곤인구를 흡수시켜 불평등도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부터 물가고(物價高)하에서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내자동원을 위하여 고금리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물가고와 고금리정책은 고리의 사채를 보편화시켜 1970년에는 부실기업의 속출로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또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노사간의 갈등 심화로 외자유치마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외증에 정부는 1970년 초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 공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노동문제를 정부가 직접 개입 조정하게 하였다.<sup>2)</sup> 그리고 1972년 8월 3일에는 8·3조치로 사채를 동결시켰다.<sup>3)</sup> 또 난국은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이어져 1973년 10월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11월에 유신헌법이 공포되면서 산업계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더욱이 유신헌법을 근거로 1974년 말에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노동 운동은 일시중단, 수중으로 잠복시켰다. 1973년에 비롯된 석유파동

1) 玄鎮權·姜錫勳 [12], Lydall [30].

2) 韓國開發研究院 [10] pp. 273~274.

3) 韓國開發研究院 [10] pp. 289~310.

은 1974년의 도매물가지수를 1년 만에 42%나 상승시켰고, 수출 원자재를 비롯한 수입가격지수는 40.3%를 상승시켜 수출주도 성장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한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충격적 사태가 연발되면서도 1977년에 100억 달러 수출목표는 달성하게 된다. 수출목표달성은 1970년대 후반 중동 건설시장 진출이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근로자의 분배몫 축소도 그에 못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석유파동에서 비롯된 물가고에 의한 수출원가 상승을 상쇄시킨 것은 근로자들의 저임금 감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건설경기의 호황과 수출이 순조롭게 증가하면서도 1975년부터 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악화 일로에 있었다. 더욱이 1979년의 유신정권 붕괴와 제5공화국의 탄생 등의 여파로 1980년대 전반기까지 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1986년부터 국제적 환경은 서서히 호전되어 저유가, 저금리 그리고 환율의 하락이라는 소위 3저시대를 맞게 되면서 근로자소득의 불평등은 개선되기 시작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에 새로운 충격을 안게 한다. 즉, 동면기로 잠복했던 노동 운동이 제5공화국의 말기적 누수기를 맞으면서 마치 화산 분화구의 불길과 같이 거세지기 시작했을 때, 마침 정부는 한편에서 부동산투기와 아파트가격 등귀를 막기 위하여 아파트 200만 호 건설을 발표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1987년 11월 노동조합의 자율성 제고와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욕구를 수렴시킨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자율적 노동조합 설립을 보장하게 하고 나아가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게 하였다.<sup>5)</sup> 이러한 법적 보장은 노동 운동을 더욱 격화시켜 노동집약적 섬유산업에서의 한계업체를 퇴출케 하고 또 임금인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누적된 대외부채가 1986년부터 현저하게 개선되는 경향이었으며, 더욱이 1987년과 1988년 두 해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무역수지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비록 무역수지의 흑자가 경상수지의 흑자로 이어가지는 못했으나 외환사정의 호전과 프라자합의에 의한 원화가치의 상승은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또 노동시장의 파격적인 임금인상이 가세하여 가계소비를 크게 촉발시켰다. 이러한 호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구매력으로 이어지고

4) 韓國開發研究院 [10] pp. 216~217.

5) 韓國開發研究院 [10] p. 481.

〈표 1〉 근로자가구소득의 분위별 소득배분율 및 지니계수

(단위: %)

연도	1분위	2분위	B/A	지니계수
1965	3.7	22.5	6.1	0.289
1970	4.5	22.5	5.0	0.266
1975	3.3	24.7	7.5	0.312
1980	3.1	24.4	7.8	0.312
1985	2.9	24.8	8.6	0.318
1990	3.2	23.9	7.5	0.302
1995	3.3	22.6	6.8	0.287
1997	3.2	22.4	7.0	0.283
1998	2.6	25.7	9.5	0.316
1999	2.7	25.5	9.4	0.320
2000	2.9	25.7	8.8	0.326

자료: 지니계수는 〈부표 4〉의 근로자가구소득 지니계수에서 발췌된 것임.

나아가서 아파트등 주택수요의 급증을 유발시켰다 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이 구매력이 커진 것은 원화가치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임금상승도 그에 편승했기 때문이다. 마치 기름에 불을 부치듯 노동 운동의 활성화에 건설업에서의 노동수요급증은 자연스럽게 임금의 상승으로 연결되었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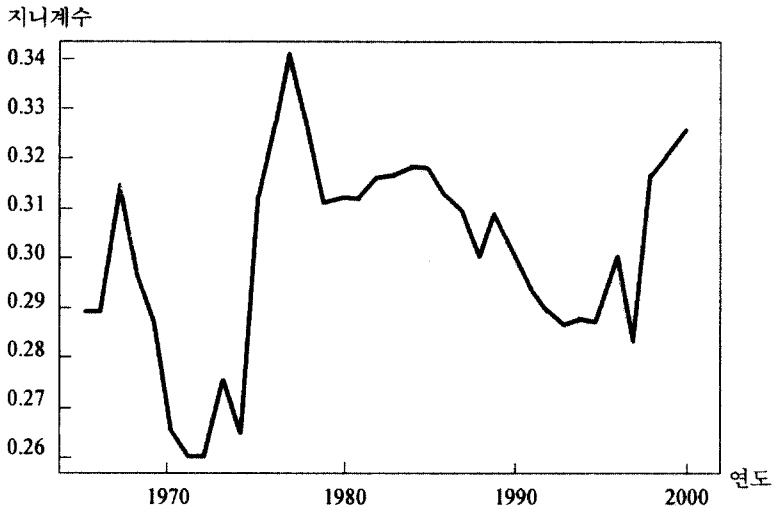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여건의 조성으로 불평등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 개선되고 있었다. 이 기간의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15%나 되며 특히 아파트 200만 호 신축이 발표되고 신축이 개시되던 1988년과 1990년까지 2년간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22%나 되었다.<sup>7)</sup> 또 불평등이 악화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1996년까지 가계소비증가와 임금상승을 대비해 보면, 이 기간에 평균임금은 29배가 증가한데 대하여 근로가구의 가계소비는 24.5배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1975년도 근로가계의 흑자율(=(소득-소비)/소득)은 1975년에 9.6%이던 것이 1996년에는 28.3%나 된다.<sup>8)</sup> 근로가계의 흑자율 증가는 주거비의 안정, 즉 아파트가격의 안정이 크게

6) 韓國開發研究院 [10] p. 279.

7) 통계청 [9] pp. 190~191.

8) 통계청 [9] p. 147.

〈그림 1〉 근로자가구 소득불평등(1965~2000)



주: 〈부표 4〉의 근로자가구소득의 지니계수에 의해서 작성된 것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가계소비 가운데 주거비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아파트의 공급가격을 실질가격보다 낮게 공급한 것도 한 원인이다.<sup>9)</sup>

1990년대 후반에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OECD 각국과는 달리 한국의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었다.<sup>10)</sup> 더욱이 외환위기가 시작되던 1997년부터 불평등은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었으나 이것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그것은 높은 가계의 구매력이 해외로 전환되면서 국내의 투자 감퇴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임금격차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즉, 경기하강 국면에서 근로자 소득의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커지게 마련이다. 불평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임금격차의 추이를 보면 1980년 이후 1995년 사이에 학력별이나 연령별 임금격차는 감소하는데 대하여 기업의 규모별 격차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제조업의 경우 기업규모 29인 이하와 500인 이상 규모 간의 임금격차는 1980년에 107%이던 것이 1995년에는 140%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학력간의 임금격차는 축소

9) 李東憲·鄭根存 [5].

10) 尹起重 [3] p. 18, Jain [21].

〈표 2〉 소득분위별 소득배분율과 지니계수

(단위 : %)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지니계수
1980	1.57	29.46	18.5	0.3891	
1985	2.59	27.62	10.7	0.3449	
1988	2.81	27.82	9.9	0.3355	
1993	2.75	24.25	8.8	0.3097	
1996	2.75	23.27	8.5	0.2954	

주: 표에서 배분율은 소득배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의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전국' 부분임.

되는 경향이다. 즉, 고등학교졸업자 대비 대학졸업자의 임금격차는 1980년에 223%이던 것이 1995년에는 156%로 축소되었다.<sup>11)</sup>

학력간의 임금격차는 청장년층에서는 현저하게 개선되는 경향이었으나 노령화되면서 악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임금격차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으로 분석된다. 즉, 교육투자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고학력 노동인력의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고학력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이러한 현상은 기술진보가 비중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또 도시의 경우 노동인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소득격차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도 검증되었다.<sup>13)</sup>

〈표 1〉과 〈표 2〉를 미국이나 OECD 각국과 비교할 때,<sup>14)</sup> 정부 발표의 불평등 지표만으로 분배의 형평을 요구하는 여론을 설득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한국개발원은 전국 규모 4,000가구 표본으로 소득과 자산의 분포상태를 조사했고 또 정부는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토지 가운데 100만 필지를 표본으로 추출,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 한국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자 40%가 전체소득의 15%만을 분배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의 소득을 분배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상위 20%

11) 한국노동연구원 [11] pp. 40~43.

12) 崔康植 [6].

13) 裴垓浩 [2].

14) Hills [20], Burkhauser [17], Levy [27].

의 사람들은 전체소득의 47%를 분배받는다<sup>15)</sup>고 조사된 데 반하여 정부는 44%밖에 안 된다. 이와 같이 한국개발원의 분석이 정부통계에 비하여 과대 평가된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것도 과소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한국개발원에 의해서 추정된 국민소득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과를 대비하면 한국개발원의 경우 15%나 과소평가되었다.<sup>15)</sup> 1988년 기준으로 한국개발원의 추정치는 89조 4,730억 원인데 대하여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는 102조 9,230억 원이나 된다.<sup>16)</sup> 이러한 차이는 한국개발원의 추정에 이자와 배당 등이 누락된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소득 가운데 약 75%는 근로자에게 배당되며, 나머지 25%는 자본가나 지주인 고소득자에게 배당된다. 이 25%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위 소득층이 보유한 자본자산에서 만들어지는 소득이므로 직접 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개발원의 불평등도 추정치는 과소평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개발원이 조사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부의 불평등 상태는 상위 10% 사람들이 소유한 부는 전체의 43%나 되며, 상위 5%의 사람들은 31%, 그리고 상위 1%의 사람들은 전체 부의 14%나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부는 토지자산과 금융자산의 합계를 뜻한다. 이들의 불평등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개인자산이 0.85, 실질자산이 0.60, 금융자산이 0.77, 그리고 소득은 0.40이나 된다.<sup>17)</sup> 이것은 면적기준이므로 토지소유면적의 크기가 바로 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sup>18)</sup>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가 1988년 전국의 표본토지를 분석한 결과, 당시의 평가액은 적어도 2.6조 원(미불화로 3,000억 달러)으로 추정되었다.<sup>19)</sup> 위원회의 의견에 의하면 실제의 평가액은 추정치의 2배내지는 3배 정도나 된다고 한다. 불평등상태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28%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72%는 토지를 전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지소유의 집중화를 면적 기준으로 할 때, 토지소유자 상위 5%가 전국 토지의 62.5%를 소유하고, 상위 10%는 전국 토지의 77%, 그리고 상위 25%는 전국 토지의 91%나 소유하고 있다는

15) 尹起重 [3] pp. 36~38.

16) Leipziger, Dollar, Shorrocks and Song [25] p. 23.

17) Leipziger, Dollar, Shorrocks and Song [25] pp. 22~24.

18) Jianakoplos and Menchik [23].

19) Jianakoplos and Menchik [23] p. XIV.



것이다. 토지소유의 불평등지표인 지니계수는 0.85나 된다.<sup>20)</sup>

정부발표의 1980년 이후의 불평등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사회통계조사」 결과 얻어진 소득불평등도의 대표적 지표인 '전국'의 분위별 소득배분율과 지니계수의 변동추이는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에서 1996년까지 제1분위 사람들의 소득배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제10분위 사람들의 배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제1분위 소득배분율 대비 제10분위의 소득배분율 비는 18.5배에서 8.5배까지 감소하고 있다. 또 지니계수도 이 기간에 0.39에서 0.29로 현저한 개선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근로자가구의 소득분위별 소득배분율과 지니계수의 변화도 1980년 이후 1997년까지 현저한 개선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표 3> 참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구소득의 불평등도 변동은 설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OECD 각국과의 비교나<sup>21)</sup> 한국개발원의 「소득과 부의 공정분배위원회 보고서」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지표인 지니계수가 0.40이라는 점<sup>22)</sup>과 그리고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의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보고서」에서 민유지 소유의 토지면적기준 불평등도가 지니계수로 0.85라는 것과<sup>23)</sup> 대비하면 정부발표의 불평등지표의 재검토를 요하게 된다. 우선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과거의 가구소득에 의한 불평등 평가의 대안으로 가구소비의 측면에서 탐구해 본다.

### Ⅲ. 자료의 검토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검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 조사의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조사자료의 검토이다. 소득불평등 문제는 가구소득자료에 의해서 계

20) 土地公概念研究委員會 [7] pp. 33~43.

21) 玄鐵權·姜錫勳 [12].

22) 尹起重 [3] p. 37.

23) 尹起重 [3] p. 38.

측 분석해야 하나 가구소득은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므로 그 조사대상 범위가 적다. 따라서 근로자가구소득을 분석하고 도시가구의 소비측면에서 불평등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 소비와의 관계를 분석 검토한다.

「도시가계조사」는 1942년 한국은행(당시명칭 조선은행)에서 실시해 오던 「생계비조사」가 첫 출발이었다. 이러한 도시 생계비조사는 서울만을 대상으로 유의표본에 의해서 1945년까지 조사해 왔으나 1945년 8월 이후 중단되었다. 1951년 7월 임시수도 부산에서 한국은행은 유의표본 60세대를 대상으로 국민의 소비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1953년까지 생계비를 조사했고, 1953년부터 역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추계를 위하여 1953년도에 부산에서 조사한 생계비조사 자료를 이용했으나 그의 미비점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6·25휴전 이후 1954년부터 서울의 근로자가구 100가구를 유의표본으로 추출하여 1959년까지 조사해 왔으나 자료의 이용가치가 적어 1960년에는 조사방법을 전면 개편하여 1962년 말까지 유의표본으로 도시가계의 변동을 조사해 왔다. 1960년 1월부터는 정부통계의 강화정책으로 「도시가계조사」를 통계청(당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하였다.

「도시가계조사」는 ① 도시가계의 실태와 생활수준 변동의 파악, ②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산출 자료, ③ 국민소득 추계를 위한 가계소비자료, 그리고 ④ 구호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임금자료 등 경제 및 사회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서 조사된다. 이러한 조사목적에 비추어 전 도시, 전 가구의 「소비계층별 가구분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가계조사」는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960년대 이후 도시의 확장과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대상 도시가 증가한다. 즉, 도시의 수가 1960년대는 32개, 1970년대는 35개, 1980년대는 50개, 1992년에는 69개 그리고 1996년에는 72개 도시로 확장되었다. 이들 도시에 거주하는 전 가구가 조사대상이기는 하나 다음 가구는 도시가구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 점과 조사상의 어려움 때문에 제외하고 있다. 즉, ① 농가, ② 어가, ③ 단독가구, ④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로서 음식점, 여관, 하숙업 등을 경영하는 겸용주택 가구로서 영업수지와 가계수지가 분리되지 않는 가구, 그리고 가구원의 구성이 가족위

〈표 3〉 표본설계 개편연도별 전 도시가계와 근로가계의 표본크기

연도	전 도시가계	근로가계	B/A
1963	1,703	955	0.56
1969	1,805	1,079	0.60
1972	1,579	881	0.56
1977	3,142	2,078	0.66
1982	3,584	2,188	0.61
1988	4,273	2,794	0.65
1992	4,522	2,913	0.64
1996	5,233	3,252	0.62

자료: 해당연도의 「도시가계연보」.

주가 아닌 혼성가구와 ⑤ 외국인 가구는 제외되고 있다. 조사대상기간은 매월 별로, 일별 일계표를 작성하게 하고 월별로 수집 집계, 분기별·연도별로 정리 공표하게 된다.

「도시가계조사」에서 가계수지에 관한 수입과 지출 항목의 분류는 IOL과 UN 통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계표의 기재사항은 다음 세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①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② 가구수입에 관한 사항, 그리고 ③ 가구 지출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같이 작성된 가계부(일계표)는 월말에 회수되어 집계된다. 회수된 일계표의 유효율은 일정하지는 않으나 1980년대의 경우는 75% 정도였으나 1990년대는 80%를 상회하고 있다. 「도시가계조사」 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이후 통계청에서는 1960년도의 인구총조사자료를 근거로 1963년부터 확률표본추출법을 도입하여 전국 32개 도시에서 1,800가구의 확률표본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도시가계조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집계되는데, 그 하나는 전 가구에 대한 「전 도시 전 가구의 가계수지」이며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이다. 근로자가구 이외의 가구는 제2항인 가구수입에 관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고 제1항과 제3항만을 조사하게 된다. 즉, 근로자가구는 수입에 관한 사항이 조사되므로 가구소득이 파악된다. 그러나 근로자가구 이외의 가구는 소득이 조사되지 않는다.

표본설계는 그 동안 7차례나 개편했는데 개편할 때마다 「도시가계조사」에서

얻는 두 가지, 즉 「전 도시 전 가구의 가계수지」와 「근로자가구 가계수지」 자료의 표본크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고 있다. <표 3>의 표본크기는 유효 회수 조사표 매수의 월평균치이므로 표본설계에서 결정된 크기보다 적다.

#### IV. 소득탄력성과 소비탄력성

가구소득은 근로자가구 조사에서 조사되고, 전 도시 전 가구 조사에서는 소비지출만 조사되고 가구소득은 조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전 도시 소비가구 조사의 표본은 근로자가구보다 약 50% 정도가 크다. 전 도시 소비가구에 대한 조사는 표본크기가 크다는 이유로 가구소비의 특성을 찾아, 소득의 불평등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우선 가구소득이 조사되는 근로자가구의 비목별 소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고, 가구의 소득불평등과 대비해 본다. 이들 양자간의 관계에 의해서 가구소득을 대표할 수 있는 가구의 소비재 및 서비스를 찾게 한다. 이와 같은 인식에 의해서 대표본인 전 도시 전 가구에 대한 비목별 가구소비의 탄력성을 추정, 가구소비의 특성을 인식하고 가구소득 변동을 반영하는 소비비목을 찾게 될 것이다. 가구소득 변동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비목을 찾기 위하여 우선 도시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각 소비비목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고, 이 가운데 소득탄력성이 가장 높은 비목을 찾는다. 이러한 소득탄력성은 연도별·비목별로 계측해서 비목별 소득탄력성의 시계열을 얻는 것이다.

소득탄력성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i$ 번째 가구의  $j$ 번째 비목의 소비지출을  $C_{ij}$ 로 그리고  $i$ 번째 가구의 소득을  $y_i$ 라 할 때,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이 선형으로 가정한다.

$$C_{ij} = a_j + \beta_j y_i + U_{ij} \quad (1)$$

$$i = 1, 2, \dots, n, \quad j = 1, 2, \dots, k$$

위에서  $U_{ij}$ 는 기대치 0, 공분산 0, 그리고 분산  $\sigma^2$ 을 갖는 오차항이다.<sup>24)</sup>

$i$ 가구의 가구소비지출을  $C_i$ ,  $i$ 가구의  $j$ 비목 소비지출을  $C_{ij}$ 라 할 때 엔겔곡선인 지출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C_{ij} = f_j(C_i; \theta_j; U_{ij})$$

$$i = 1, 2, \dots, n, \quad j = 1, 2, \dots, k \quad (2)$$

위에서  $\theta_j$ 는 모수벡터이며,  $U_{ij}$ 는 소비함수에서와 같이 기대치 0, 공분산 0, 그리고 분산  $\sigma^2$ 을 갖는 오차항이다.  $k$ 개 비목의 소비지출이 서로 배반적 이므로 모든 비목의 소비를 가산하면 가구소비지출이 된다. 즉,  $C_i = \sum_{j=1}^k C_{ij}$   $i = 1, 2, \dots, n$ 이 된다. 식 (2)에 의해서 모수추정을 위한 실증적 지출함수는 대체로 여섯 가지 형태가 제안되었으나 이 가운데 간단한 선형모형, 즉 Stone<sup>25)</sup> 과 Theil<sup>26)</sup>이 제안한 모형에 의해서 모수를 추정하기로 한다. 즉,

$$C_{ij} = \alpha^1_j + \beta^1_j C_i + U_{ij} \quad (3)$$

식 (3)의 제약조건은  $\sum_{j=1}^k \alpha^1_j = \sum_{j=1}^k U_{ij} = 0$ ,  $\sum_{j=1}^k \beta^1_j = 1$ 이며<sup>27)</sup>  $j$ 비목에 대한  $i$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탄력성은  $\eta_{ij} = \beta^1_j / w_{ij}$ 가 된다. 여기서 가중치  $w_{ij}$ 는  $w_{ij} = C_{ij} / C_i$ 이다. 식 (3)의 변수  $C_i$ 와  $C_{ij}$ 에 대수를 취해서 모수를 추정 하면,  $\beta^1_j$ 가  $j$ 비목 소비지출에 대한 가구지출의 탄력성이 된다.<sup>28)</sup>

식 (1)에 의해서 소득탄력성을, 그리고 식 (3)에 의해서 지출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식 (1)과 식 (3)의 변수  $C_{ij}$ ,  $y_i$ ,  $C_i$ 에 대수를 취하면 다음을 얻게 된다. 즉,

$$\log C_{ij} = \alpha_j + \beta_j \log y_i + U_{ij} \quad (1')$$

24) Livatan [29].

25) Stone [35].

26) Theil [36].

27) Leser [26].

28) Giles [18].

〈표 4〉 가구소비 가운데 교육비 비중의 추이(1965~2000)

(단위: %)

교육비	4.40	6.61	6.49	5.06	7.23	8.80	9.77	11.17
-----	------	------	------	------	------	------	------	-------

주: 연도별 「도시가계연보」에 의해서 작성함.

$$\log C_{ij} = \alpha^1_j + \beta^1_j \log C_i + U_i, \quad (3')$$

식 (1')과 식 (3')에서의 계수  $\beta_j$ 와  $\beta^1_j$ 의 추정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의에 의해서 탄력성이 된다. 즉,  $\beta_j$ 의 추정치는  $j$ 비목의 소득탄력성이, 그리고  $\beta^1_j$ 의 추정치는  $j$ 비목 소비의 가구소비지출에 대한 탄력성이 된다.

「도시가계연보」에 의하면 도시가구소비지출은 1965년부터 1981년까지 5대 비목으로 분류되었으며, 1982년부터 1996년까지는 9대 비목, 그리고 1997년 이후는 10대 비목으로 분류되었다. 1950년대부터 향도이농의 이유가 농사의 흉작이나 호구지책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교육도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외 사교육비가 지하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 또 도시가구의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점점 커져 1997년부터 한 비목으로 독립되는 점으로 보아 교육비는 가구소비지출 가운데 중요한 비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구소비의 비목별 소비특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가구소비지출의 비목 가운데 한 항목인 교육비를 독립시켜 (1996년까지) 다른 비목과 같이 탄력성과 불평등을 추정하게 된다. 1965년부터 1981년까지는 교육비가 '잡비' 비목에 그리고 1982년부터 1996년까지는 '교육·교양·오락' 비목에 포함되었다. 연도별 '잡비' 비목 가운데 교육비 비중이 가장 크고 또 '교육·교양·오락' 비목에서도 교육비 항목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비 항목을 독립시켜 다른 항목과 대비해 보기로 한다.

〈부표 1-1〉, 〈부표 1-2〉 그리고 〈부표 1-3〉은 식 (1')에 의해서 추정된 근로자가계의 비목별 소득탄력성이다. 〈부표 1-1〉은 1962년부터 1981년까지 제1기의 6대 비목별 소득탄력성이다. 이 제1기는 본래 5대 비목으로 분류되었으나 '잡비' 가운데 교육비 항목을 추출하여 별도의 '교육' 비목으로 설정, 6대 비목

〈표 5〉 두 비목별 탄력성 기간평균치 비교

		비목		비목	
1기 (1965~1981)	광 열	0.585	0.659	-	-
	식 료 품	0.656	0.796	-	-
	주 거	0.835	1.041	-	-
	피 복	1.042	1.264	-	-
	잡 비	1.113	1.328	-	-
	교 육 비	1.509	1.952	-	-
2기 (1982~1996)	주 거	0.159	0.548	광 열 · 수도	-
	광 열 · 수도	0.324	0.680	식 료 품	-
	식 료 품	0.400	0.904	주 거	-
	보건 · 의료	0.531	0.990	교통 · 통신	-
	교통 · 통신	0.568	1.156	기타소비지출	-
	피복 · 신발	0.618	1.169	-	-
	가구집기 · 가사용품	0.643	1.228	보건 · 의료	-
	기타소비지출	0.666	1.430	가구집기 · 가사용품	-
	교 육 비	0.674	1.596	교육 · 교양 · 오락	-
	교육 · 교양 · 오락	0.705	1.767	교 육 비	-
3기 (1997~2000)	광 열 · 수도	0.222	0.408	-	-
	주 거	0.283	0.652	식 료 품	-
	보건 · 의료	0.395	1.049	주 거	-
	식 료 품	0.419	1.082	보건 · 의료	-
	교양 · 오락	0.551	1.092	교통 · 통신	-
	피복 · 신발	0.683	1.103	기타소비지출	-
	교통 · 통신	0.695	1.217	피복 · 신발	-
	기타소비지출	0.707	1.383	교양 · 오락	-
	가구집기 · 가사용품	0.755	1.398	-	-
	교 육 비	0.831	1.633	-	-

주: 상단 좌측의 비목은 소비탄력성에 대응되는 비목임.

으로 변형되었다. 〈부표 1-2〉는 1982년부터 1996년까지 제2기의 10대 비목별 소득탄력성이다. 제2기도 본래 9대 비목으로 분류되었으나 '교육·교양·오락' 비목에서 교육비 항목을 추출하여 별도의 '교육' 비목을 설정 10대 비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부표 1-3〉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제3기의 소득탄력성이

〈표 6〉 기간별 소득탄력성과 소비지출탄력성의 유형

	식료품 광열·수도	식료품 광열·수도	식료품 광열·수도
I			
II	주거 피복 잡비	주거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	주거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
III	교육	교육 교육·교양·오락 가구집기·가사용품	교육 교양·오락 가구집기·가사용품

다. 이 제3기는 본래 교육비가 독립되어 10대 비목으로 분류되었다. 또 〈부표 2-1〉, 〈부표 2-2〉 그리고 〈부표 2-3〉의 소비지출탄력성도 소득탄력성에서와 같이 3기로 나누었으며 비목설정도 소득탄력성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교육비를 추출, 제1기와 제2기는 별도 '교육' 비목을 설정하였다. 제1기와 제2기의 비목 가운데 교육비는 2중으로 계산된 셈이다. 〈부표 1-1〉, 〈부표 1-2〉, 〈부표 1-3〉의 소득탄력성과 그리고 〈부표 2-1〉, 〈부표 2-2〉, 〈부표 2-3〉의 소비지출탄력성을 기간별·비목별로 평균을 구하고 평균치 크기에 따라 정리하면 〈표 5〉를 얻는다. 이 표를 일관할 때 주목되는 것은 첫째, 모든 기간에서 소득탄력성이나 소비지출탄력성이 가장 큰 것은 교육비 비목이라는 것과, 둘째는 소득탄력성이나 소비지출탄력성의 순서가 바뀌지기는 하나 큰 차이가 없는 점, 그리고 셋째는 소득탄력성보다 소비지출탄력성이 보다 크다는 점이다.

〈표 5〉에 의해서도 평균 크기순서로 유형화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비목들을 집락화(clustering)시키기 위하여 판별법에서 평균연쇄법(mean linkage)에 의한 집락분석<sup>29)</sup>으로 분류한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3개 기간 다 같이 3개 집락으로 각각 유형화되었다.

29) Johnson and Wichern [24] pp. 748~751.



〈표 6〉에서 집락 I 은 소득이나 가구지출의 탄력성이 가장 낮은 비목들이다. 이들은 소득에 대하여 비탄력적인 비목으로서 필수재라 할 수 있다. 집락 III 은 I 과는 달리 탄력성 값이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사치재에 속한다 할 수 있다. 필수재와 사치재의 중간에 속한 집락 II 는 준필수재라 할 수 있다. 제1기에는 사치재가 '교육' 비목 하나뿐이었으나 제2기에는 '교육' 비목 외에 '교육·교양·오락' 비목과 '가구집기·가사용품' 비목이, 그리고 제3기도 '교육', '교육·교양·오락' 비목과 '가구집기·가사용품' 비목이 포함된다. 제2기의 '교육·교양·오락' 비목은 '교육'이라는 고도의 사치재가 포함되었다는 점과 교양과 오락에 대한 지출은 소득에 대하여 탄력적인 성격의 소비재라는 점에서 사치재로 분류된다. 또 '가구집기·가사용품' 비목도 소득에 대하여 민감한 내구재이므로 탄력성이 높아 사치재로 분류된다. 제2기와 제3기에 '교육' 비목 외에 두 비목이 더 포함되지만 〈부표 1-1〉에서 〈부표 2-3〉까지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두 비목보다 '교육' 비목의 탄력성이 가장 높다.

## V. 비목별 소비 불평등과 종합

위에서 근로자가구의 비목별 소비에 대한 소득탄력성과 전 도시 전 가구의 비목별 소비에 대한 가구소비지출 탄력성에 의해서 특성별로 비목들을 집락화하였다. 소비비목은 제1기(1965~1981)는 6개로, 제2기(1982~1996)는 10개, 그리고 제3기(1997~2000)는 10개로 나누고, 기간별·비목별 두 탄력성의 평균크기에 따라 〈표 5〉와 같이 배열하고 또 탄력성 크기에 따라 3개 집락으로 유형화(〈표 6〉 참조)해 보았다. 1965년 1인당 소득(GNI) 100달러 수준에서 2000년에 1만 달러에 육박했음에도 소비유형은 소득변화 정도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즉, 제1기에 '교육' 비목이 집락 III 에 속해 있었으나 제2기에는 '교육' 외에 '교육·교양·오락' 그리고 '가구집기·가사용품'이 포함된다. 제2기의 '교육·교양·오락' 비목에서 '교육'만을 별도의 비목으로 설정했을 뿐 교육지출액은 공제하지 않았다. 교육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집락 III 에 포함되었는지 분명치 않다. 집락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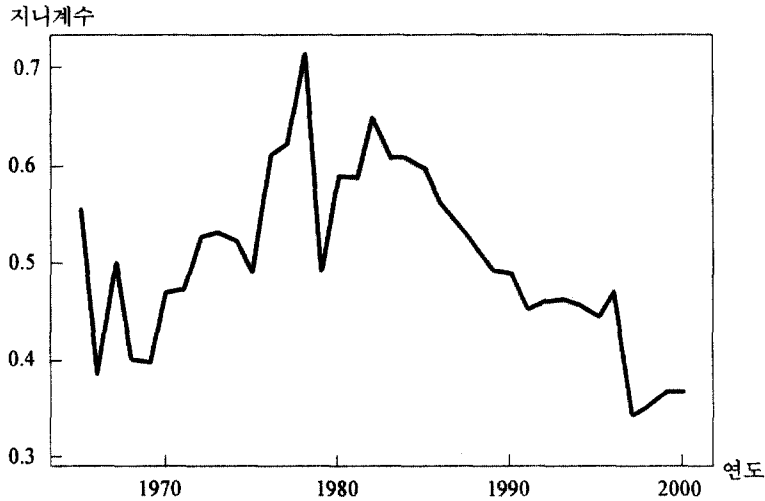
〈표 7〉 기간별·비목별 지니계수 기술통계량

1기 (1965~1981)	0.204	0.013	광 열
	0.239	0.031	식 료 품
	0.340	0.027	주 거
	0.369	0.050	피 복
	0.392	0.037	잡 비
	0.523	0.087	교 육 비
2기 (1982~1996)	0.179	0.041	광열·수도
	0.217	0.011	식 료 품
	0.312	0.059	주 거
	0.363	0.011	피복·신발
	0.371	0.026	기타소비지출
	0.375	0.084	교통·통신
	0.413	0.065	보건·의료
	0.498	0.021	가구집기·가사용품
	0.509	0.042	교육·교양·오락
	0.521	0.069	교 육 비
3기 (1997~2000)	0.135	0.082	광열·수도
	0.209	0.010	식 료 품
	0.357	0.013	기타소비지출
	0.368	0.019	주 거
	0.369	0.007	보건·의료
	0.378	0.006	피복·신발
	0.378	0.034	교통·통신
	0.489	0.014	교 육
	0.489	0.020	교양·오락
	0.502	0.011	가구집기·가사용품

의 비목들이 소득과 가구소비지출 변동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탄력성 분석에 의해서 가구소비가 비목별로 같지 않기 때문에 평균연쇄법으로 집락화한 결과 3개의 유형으로 분할할 수 있었다.

소비 비목별로 특성이 같지 않다는 인식하에 연도별 소비 비목별로 소비의 불

〈그림 2〉 교육비 불평등도 추이(1965~2000)



주: 〈부표 4-1〉, 〈부표 4-2〉, 〈부표 4-3〉의 '교육' 비목의 지니계수에 의해서 그려진 것임.

평등도를 계측하고, 불평등도에 의해서 탄력성 분석에서와 같이 기간별로 유형화 시켜본다. 불평등도는 지니계수의 측도를 이용하며 비목의 분류와 기간은 탄력성 분석에서와 같이 한다. 비목의 분류가 기간별로 같지 않으므로 비목별·기간별·연도별 불평등도 측도 지니계수는 〈부표 3-1〉, 〈부표 3-2〉 그리고 〈부표 3-3〉에 수록되어 있다. 비목별로 지니계수의 기간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기간별로 평균치의 크기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가구소비의 비목별 불평등도인 지니계수를 〈표 7〉과 같이 정리하고 보면 대체로 그 크기순서에 따라 집락화할 수 있으나 탄력성 집락화에서와 같이 평균 연쇄법을 적용하면 〈표 6〉에서와 같이 3개 유형으로 집락화되어 〈표 6〉과 똑 같은 결과를 얻는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첫째 소득탄력성과 소비지출의 탄력성 그리고 지니계수 3자가 다 같이 3개 집락으로 꼭 같이 유형화되었다. 즉, 집락별로 포함된 비목이 같다. 3자간에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목별로 소비지출탄력성이 소득탄력성보다 높다. 이것은 비목별 소비지출 변동에 대하여 가구소득보다 가구소비 지출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제1기와 제2기에 조정한 '교육' 비목만이 전 기간에 일관성이 있다. 넷째, 소득탄력성, 소비지출탄력성 그리고 불평등도 지니계수를 연도별·비목별로 대응시켜 보면 소득탄력성이 높으면 소비지출탄력성도 높고 또 지니계수도 높다. 다섯째, '교육' 비목의 지니계수추이(1965~2000)는 근로자가구소득의 지니계수의 변동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즉, 불평등의 정점은 근로자가구소득 지니계수가 1977년이고 '교육'지니계수는 1978년으로 1년의 시차고, 또 제1기의 저점은 소득이 1971년과 1972년이고 '교육'은 1971년이다. 그리고 제3기의 저점은 두 지니계수 다 같이 1997년이다. 끝으로 '교육비' 비목의 소비지출의 불평등도가 도시가구 생활수준의 대표적 불평등도 지표라 생각된다.

그러나 첫째는 근로자가구소득의 불평등과 '교육' 비목의 불평등도의 변동 양상이 거의 같다는 것은 우연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론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검토 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탄력성과 불평등 간의 관계도 이론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부 표

<부표 1-1> 전 도시 근로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1962~1981)

연도	총지출	주거	주거외	문화	기타	교육
1962	0.589	1.045	0.652	1.175	1.175	1.308
1963	0.632	1.006	0.700	1.412	1.253	1.332
1964	0.716	1.036	0.678	1.170	1.271	1.743
1965	0.748	0.725	0.773	1.413	1.456	1.980
1966	0.932	0.929	0.679	1.300	1.480	1.340
1967	0.667	0.661	0.579	0.909	1.089	1.560
1968	0.695	0.730	0.570	1.274	1.087	1.250
1969	0.663	0.936	0.488	1.088	1.053	1.080
1970	0.726	1.097	0.550	1.106	1.143	1.780
1971	0.603	0.874	0.528	0.949	1.134	1.780
1972	0.667	0.764	0.624	0.693	1.262	1.990
1973	1.039	1.286	0.871	1.071	1.448	2.812
1974	0.748	0.710	0.595	1.088	1.134	1.825
1975	0.622	0.884	0.533	1.004	0.971	1.145
1976	0.534	0.738	0.487	0.885	1.011	1.303
1977	0.526	0.798	0.488	0.938	0.949	1.321
1978	0.506	0.694	0.440	0.850	0.813	1.070
1979	0.511	0.610	0.482	0.848	0.807	1.150
1980	0.505	0.614	0.505	0.881	0.888	1.238
1981	0.484	0.566	0.476	0.781	0.827	1.178

〈부표 1-2〉 전 도시 근로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1982~1996)

1982	0.505	0.250	0.494	0.681	0.850	0.893	1.030	0.621	0.454	0.516
1983	0.464	0.285	0.458	0.944	0.732	0.934	0.920	0.622	0.924	1.017
1984	0.436	0.227	0.438	0.748	0.696	0.848	0.887	0.547	0.837	0.875
1985	0.440	0.188	0.442	0.690	0.662	0.705	0.845	0.513	0.850	0.890
1986	0.408	0.117	0.389	0.568	0.597	0.699	0.754	0.445	0.735	0.763
1987	0.294	0.078	0.274	0.400	0.445	0.491	0.422	0.349	0.530	0.545
1988	0.315	0.049	0.251	0.532	0.450	0.430	0.556	0.345	0.497	0.579
1989	0.401	0.290	0.274	0.558	0.614	0.324	0.584	0.608	0.601	0.610
1990	0.323	0.172	0.246	0.528	0.485	0.380	0.490	0.568	0.539	0.439
1991	0.270	-0.055	0.238	0.429	0.442	0.327	0.567	0.490	0.478	0.587
1992	0.473	0.292	0.317	0.810	0.761	0.554	0.808	0.793	0.795	0.808
1993	0.469	0.268	0.294	0.767	0.687	0.445	0.768	0.756	0.763	0.767
1994	0.443	0.122	0.272	0.714	0.688	0.326	0.752	0.771	0.731	0.537
1995	0.414	-0.002	0.306	0.711	0.621	0.331	0.646	0.541	0.691	0.652
1996	0.342	0.101	0.163	0.561	0.542	0.281	0.551	0.550	0.559	0.526

〈부표 1-3〉 전 도시 근로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1997~2000)

1997	0.430	0.318	0.233	0.714	0.664	0.415	0.683	0.716	0.306	0.714
1998	0.415	0.268	0.212	0.773	0.654	0.354	0.705	0.578	0.677	0.670
1999	0.420	0.269	0.234	0.771	0.675	0.357	1.124	0.689	0.588	0.741
2000	0.411	0.277	0.209	0.762	0.737	0.453	0.811	0.798	0.631	0.704

〈부표 2-1〉 전 가구의 비목별 지출에 대한 소비지출탄력성

연도	식음료	주거	의복	문화	잡비	교육비
1965	0.884	0.982	0.735	1.500	1.575	2.170
1966	0.809	1.270	0.627	1.364	1.560	1.978
1967	0.800	1.113	0.662	1.410	1.278	1.740
1968	0.806	1.010	0.608	1.374	1.302	1.761
1969	0.841	0.390	0.583	1.200	1.248	1.412
1970	0.905	1.040	0.633	1.107	1.176	1.665
1971	0.775	1.117	0.636	1.092	1.300	1.867
1972	0.742	1.196	0.656	1.019	1.302	2.063
1973	0.800	1.132	0.696	1.086	1.279	1.793
1974	0.872	1.042	0.635	1.177	1.262	2.098
1975	0.833	1.093	0.649	1.277	1.248	1.528
1976	0.769	1.064	0.611	1.336	1.377	2.333
1977	0.722	1.088	0.669	1.258	1.346	2.070
1978	0.769	1.096	0.626	1.262	1.295	2.117
1979	0.749	1.036	0.692	1.345	1.315	2.194
1980	0.715	1.021	0.760	1.319	1.345	2.106
1981	0.744	1.011	0.729	1.369	1.365	2.281

주: 소비지출은 5대 비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잡비' 비목 가운데 교육 항목을 독립시켜 탄력성을 계산하였다. 교육 항목을 추가시킨 것은 1997년 이후 10대 비목 가운데 교육비 비목시계열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임.

〈부표 2-2〉 전 가구의 비목별 지출에 대한 소비지출탄력성(1982~1996)

1982	0.639	0.854	0.735	1.456	1.202	1.438	1.802	0.829	1.032	1.964
1983	0.629	0.988	0.685	1.519	1.104	1.422	1.817	0.825	1.195	2.047
1984	0.666	0.826	0.654	1.506	1.103	1.440	1.703	0.888	1.250	1.900
1985	0.688	0.850	0.669	1.417	1.125	1.387	1.699	0.879	1.244	1.908
1986	0.705	0.809	0.666	1.422	1.056	1.410	1.658	0.826	1.211	1.833
1987	0.723	0.874	0.629	1.403	1.202	1.352	1.622	0.853	1.187	1.820
1988	0.726	0.886	0.559	1.425	1.261	1.361	1.623	0.889	1.232	1.810
1989	0.671	0.894	0.504	1.371	1.145	1.123	1.546	1.142	1.103	1.559
1990	0.678	0.947	0.523	1.437	1.163	1.148	1.506	1.085	1.113	1.505
1991	0.701	0.913	0.521	1.410	1.174	1.126	1.491	1.040	1.166	1.506
1992	0.652	0.983	0.456	1.444	1.180	1.142	1.485	1.100	1.112	1.537
1993	0.680	1.007	0.431	1.416	1.167	1.031	1.490	1.119	1.114	2.289
1994	0.689	0.915	0.423	1.385	1.203	1.056	1.492	1.154	1.144	1.587
1995	0.706	0.854	0.415	1.388	1.280	1.002	1.545	1.092	1.142	1.710
1996	0.651	0.963	0.356	1.445	1.171	0.980	1.455	1.138	1.101	1.532

주: 1982년부터 9대 비목으로 분류되었으나 1997년 이후의 10대 비목 분류에서의 '교육' 비목 시계열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교육·문화' 비목 가운데 교육 항목을 독립시켜 탄력성을 함.

〈부표 2-3〉 전 가구의 비목별 지출에 대한 소비지출탄력성(1996~2000)

1997	0.646	1.004	0.379	1.399	1.163	1.013	1.558	1.398	1.156	1.097
1998	0.681	1.038	0.419	1.419	1.195	1.038	1.682	1.325	1.020	1.079
1999	0.646	1.085	0.423	1.389	1.224	1.302	1.623	1.391	1.094	1.110
2000	0.635	1.069	0.413	1.385	1.287	0.973	1.668	1.418	1.099	1.127



<부표 3>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전 도시 전 가구 소비지출의 불평등(1965~2000)

연도	도시근로자가구소득(1)	전 도시 전 가구 소비지출(2)	도시근로자가구소득(1)	전 도시 전 가구 소비지출(2)	도시근로자가구소득(1)	전 도시 전 가구 소비지출(2)
1965	0.289	3.4	21.5	10.8	0.305	
1966	0.289	3.4	18.8	9.4	0.291	
1967	0.315	3.5	24.3	12.5	0.316	
1968	0.297	3.8	24.2	12.7	0.299	
1969	0.288	3.8	21.6	10.8	0.308	
1970	0.266	4.0	23.3	12.1	0.283	
1971	0.261	5.2	23.5	13.0	0.262	
1972	0.261	4.3	24.7	13.9	0.281	
1973	0.276	4.7	25.7	12.8	0.282	
1974	0.265	4.0	14.3	7.9	0.280	
1975	0.312	3.5	25.1	12.5	0.320	
1976	0.326	3.5	25.8	14.2	0.322	
1977	0.341	3.5	25.8	16.2	0.328	
1978	0.325	3.3	25.6	15.7	0.325	
1979	0.311	3.5	24.9	15.4	0.311	
1980	0.312	3.6	25.0	15.4	0.311	
1981	0.312	3.8	24.9	15.5	0.305	
1982	0.316	3.3	26.3	16.5	0.332	
1983	0.317	3.4	26.5	16.6	0.330	
1984	0.318	3.4	22.9	16.7	0.332	
1985	0.318	3.3	27.2	17.2	0.338	
1986	0.313	3.2	28.1	16.5	0.329	
1987	0.309	3.5	25.9	16.0	0.321	
1988	0.300	3.3	27.0	14.7	0.332	
1989	0.309	3.4	27.6	18.0	0.344	
1990	0.302	3.2	28.8	18.3	0.343	
1991	0.294	3.2	27.5	15.2	0.337	
1992	0.290	3.3	27.3	17.0	0.337	
1993	0.287	3.0	26.0	15.6	0.331	
1994	0.288	3.2	26.8	14.0	0.336	
1995	0.287	3.1	24.3	12.3	0.325	
1996	0.300	3.1	27.3	18.1	0.344	
1997	0.283	3.1	26.8	17.6	0.337	
1998	0.316	3.0	26.0	16.7	0.331	
1999	0.320	3.0	27.3	17.9	0.339	
2000	0.326	3.0	26.6	17.4	0.335	

주: (1)은 근로자가구소득의 지니계수, (2)는 전 도시 전 가구 소비지출 지니계수임.

〈부표 4-1〉 가계소비 비목별 지니계수(1965~1981)

연도	1	2	3	4	5	6
1965	0.247	0.362	0.209	0.432	0.436	0.554
1966	0.222	0.371	0.205	0.375	0.387	0.387
1967	0.327	0.352	0.212	0.419	0.390	0.504
1968	0.231	0.318	0.181	0.403	0.384	0.403
1969	0.298	0.353	0.196	0.361	0.350	0.399
1970	0.246	0.308	0.190	0.309	0.333	0.470
1971	0.205	0.296	0.200	0.285	0.343	0.475
1972	0.203	0.350	0.183	0.285	0.367	0.528
1973	0.223	0.322	0.201	0.300	0.359	0.533
1974	0.230	0.318	0.191	0.315	0.350	0.524
1975	0.244	0.387	0.208	0.388	0.405	0.493
1976	0.237	0.357	0.200	0.402	0.439	0.612
1977	0.245	0.357	0.217	0.407	0.444	0.626
1978	0.240	0.368	0.204	0.404	0.423	0.716
1979	0.221	0.331	0.212	0.396	0.413	0.495
1980	0.221	0.320	0.232	0.398	0.418	0.590
1981	0.216	0.304	0.219	0.390	0.424	0.590

<부표 4-2> 가계소비 비목별 지니계수(1982~1996)

연도	식량	주거	문화	의료	교육	교통	여유·교양	교통	기타	교육
1982	0.230	0.248	0.238	0.502	0.382	0.527	0.577	0.299	0.389	0.652
1983	0.218	0.287	0.226	0.513	0.361	0.478	0.580	0.291	0.398	0.611
1984	0.226	0.279	0.220	0.508	0.359	0.471	0.550	0.299	0.412	0.609
1985	0.230	0.262	0.230	0.495	0.372	0.464	0.556	0.291	0.416	0.597
1986	0.224	0.235	0.221	0.538	0.359	0.470	0.535	0.266	0.392	0.562
1987	0.218	0.250	0.195	0.472	0.357	0.455	0.518	0.272	0.364	0.542
1988	0.221	0.252	0.189	0.496	0.368	0.481	0.510	0.312	0.376	0.514
1989	0.225	0.313	0.172	0.485	0.374	0.381	0.509	0.444	0.373	0.492
1990	0.219	0.372	0.174	0.508	0.372	0.365	0.489	0.467	0.365	0.489
1991	0.212	0.387	0.163	0.508	0.354	0.349	0.481	0.466	0.348	0.455
1992	0.209	0.395	0.149	0.450	0.370	0.369	0.472	0.445	0.348	0.463
1993	0.209	0.398	0.137	0.489	0.340	0.342	0.462	0.450	0.340	0.463
1994	0.205	0.354	0.130	0.492	0.347	0.346	0.460	0.457	0.340	0.456
1995	0.190	0.303	0.122	0.488	0.358	0.345	0.454	0.420	0.342	0.446
1996	0.216	0.342	0.122	0.523	0.376	0.357	0.481	0.447	0.357	0.470

<부표 4-3> 가계소비 비목별 지니계수(1996~2000)

연도	식량	주거	문화	의료	교육	교통	여유·교양	교통	기타	
1997	0.209	0.354	0.125	0.516	0.371	0.364	0.473	0.500	0.421	-
1998	0.222	0.350	0.144	0.502	0.380	0.364	0.505	0.461	0.339	-
1999	0.207	0.338	0.139	0.501	0.375	0.379	0.496	0.489	0.376	-
2000	0.198	0.382	0.133	0.489	0.384	0.370	0.482	0.508	0.374	0.368

▣ 참고 문헌 ▣

1. 盧應源, “家口所得의 市道別 隔差 및 要因分析”, 『經濟學研究』, 제47집 제3호, 1999. 9, pp. 223~252.
2. 裴俊浩, “老齡社會의 所得隔差와 相續稅”, 『經濟學研究』, 제45집 제3호, 1997. 9, pp. 47~76.
3. 尹起重, 『韓國經濟의 不平等 分析』, 博英社, 1997, pp. 27~36, 239~246.
4. \_\_\_\_\_, ‘불평등에 대한 재평가’, 『연세경제연구』, 제7권 제1호,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년 봄, pp. 5~42.
5. 李東憲·鄭根存, “주택내구채를 포함한 실질 생활물가지수의 개발: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대안으로써”, 『金融學會誌』, 제5권 제2호(별호), 韓國金融學會, 2000. 11, pp. 57~99.
6. 崔康植, “學歷別 相對的 賃金隔差의 變化와 原因分析”, 『經濟學研究』, 제45집 제4호, 1997. 4, pp. 193~226.
7. 土地公概念研究委員會, 『土地公概念研究委員會 研究報告書』, 1989.
8. 통계청, 『都市家計年報』, 1965년 이후 각호.
9. \_\_\_\_\_, 『韓國의 사회지표』, 1979년 이후 각호.
10. 韓國開發研究院, 『韓國經濟 半世紀 政策資料集』, 1995.
11.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12. 玄鎮權·姜錫勳, “韓國所得分配의 國際比較”, 『經濟學研究』, 韓國經濟學會, 제46집 제3호, 1998. 9, pp. 145~167.
13. Aghion, P., Caroli, E., and Garcia-Penalosa, Cecilia,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e Perspective of the New Growth Theor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X, December, 1999, pp. 1615~1660.
14. \_\_\_\_\_,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2, 1970, pp. 244~263.
15. Allen, R. G. D., *Index Numbers in Theory and Practice*, 1975, Chicago, pp. 66~72, 210~212.
16. Atkinson, A. B., “Bringing Income Distribution in from The Cold,” *The*

- Economic Journal*, 107, March, 1997, pp. 297~321.
17. Burkhauser, R. V., "Across-National Comparison of Permanent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97. 2, Vol. 1, pp. 11~17.
  18. Giles, D. E. A. and P. Hampton, "An Engel Curve Analysis of Household Expenditure in New Zealand," *The Economic Record*, March, 1985, pp. 450~462.
  19. Goodman, A. and S. Webb, *For Richer, For Poorer. The Changing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United Kingdom, 1961~1991*, Commentary No. 42, London: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1994.
  20. Hills, J., "Introduction: After the Turning Point," in J. Hills, (ed.) *New Inequalities, The Changing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th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 Press, 1996. pp. 1~16.
  21. Jain, S., *Size Distribution of Income; A Compilation of Data*, Washington, D.C.: World Bank, 1975.
  22. Jenkins, S. P., "The Distribution of Wealth: Movement and Model," *Journal of Economic Survey*, Vol. 4, No. 4, 1990, pp. 330~360.
  23. Jianakoplos, N. A. and P. L. Menchik, "Wealth Mobil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97. 2, Vol. 1, pp. 18~31.
  24. Johnson, R. A. and D. W. Wichern,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4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1998.
  25. Leipziger, D. M., Dollar, D., Shorrocks, A. F. and Su-Yong, Song,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Korea*, World Bank, 1989.
  26. Leser, C. E. V., "Forms of Engel Functions," *Econometrica*, Vol. 31, No. 4, October, 1963, pp. 694~703.
  27. Levy, F. and R. J. Murnane, "U.S. Earnings Levels and Earnings Inequality: A Review of Recent Trends and Proposed Explanatio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X, September, 1992, pp. 1333~1338.
  28. Lewis, W. A.,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20, May, 1954, pp. 139~191.
  29. Livatan, N., "Errors in Variables and Engel Curve Analysis," *Econometrica*, Vol.

- 29, No. 3, July, 1961, pp. 336~362.
30. Lydall, H. B., "Income Distribution Dur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ternational Labor Office, World Employment Programme Research Working Paper* No. 52, Feb., 1977.
31. Powell, A. A., "Atiken Estimators as a Tool in Allocating Predetermined Aggregates,"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4, 1969, pp. 913~922.
32. Roemer, J.,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Harvard Univ. Press. 1996 pp. 237~262.
33. \_\_\_\_\_, *On Economic Inequality*, Clarendon Press, Oxford, 1972, p. 39.
34. Sen, A., *Inequality-Reexamined*, Harvard Univ. Press, 1992, pp. 12~13, 95.
35. Stone, J. R. N., "Linear Expenditure Systems and Demend Analysis: An Application to the Pattern of British Demand," *Economic Journal*, 64, 1954, pp. 511~527.
36. Theil, H., "The Information Approach to Demand Anaysis," *Econometrica*, 33, 1965, pp. 67~87.